

#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안관계 법제 연구

세계사에 길이 남을 남·북·미 3자 정상회담(2019.6.30.)은 한반도의 평화 지평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意義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은 없어지고 휴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더불어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시그널이었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뿐만 아니라 남북의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안관계 법제 연구』를 기반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경제 등의 교류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은정(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사무관, 법학박사)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 의해 타의적으로 분단이 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이 미중 패권 경쟁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문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문제,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등의 지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다자주의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는 한반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긍정적인 신호이자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중소기업이 30%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sup>1</sup>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협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sup>2</sup> 남북교류 활성화는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2018년 4월 2일 오전 분단으로 인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남북한의 협력은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는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지향적인 한반도의 비전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적 합의 통일은 우리의 통일이념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 KR20180703 056500002 HTML?input=1195m>, 검색일: 2018.7.3.

2.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604](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604), 검색일: 2018.7.3.

관계의 개선으로 인한 각국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발적인 입법수요 증가에 기인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제분석 및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활발한 경제교류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의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역사적 원인으로 1987년 이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차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1987년 타이완과 중국은 상호 왕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냉전시기가 종식되었고, 인적 및 물적 교류를 비롯한 경제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단기간 G2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생존과 발전 및 번영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타이완은 2008년 마잉주(馬英九) 정부 출범 이후 대륙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양안관계를 펼치며 대륙과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활발한 교류 이면에는 각 분야에서 갖가지 법률적 충돌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타이완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 및 행정정책을 제정하여 상호 교류로 인해 파생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변화에 따른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협력 법제는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는 동서독 관계보다 양안관계와 유사하다. 독일은 평화상태에서 통일하였다. 반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양안과 남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분단이 되었고 이념분쟁, 동족상잔의 전쟁, 갈등과 대립의 지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및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대북지원,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남북경협재개 등을 위한 지원 법제 제정에 양안 교류협력 법제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안관계 법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안 교류협력이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교류협력의 핵심은 각각의 교류법제 제정과 공동의 교류협력 조약체결, 그리고 소통창구인 민간기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법제 또한 양안을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와 통일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단일법 제정과 남북한 공동 교류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조약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변화 발전해야 하며,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에는 국제적인 이해가 얽혀 있어 중국과 미국의 협력 및 국제적인 당위성을 획득해야 한다.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남북관계의 정상화 조짐은 마침내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미국과 중국 등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북관계 교류확대에는 중국과 타이완 간의 양안관계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양안관계 법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